



교차지원 허용은 확대되어야 한다



양 영 철

제주대 학생처장

필자가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교육의 원칙이나 정부의 정책적 동기에 대한 글, 소위 전문가적 시각이 아니라 학부모로서, 초년의 입시 주무처장으로서의 경험에서 나오는 글이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싶다. 그리고 입시 모집을 위해 주위의 고3 담임선생님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일선 교사의 의견도 일부 반영되었다는 점도 알려 드리고 싶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도 학교의 형편에 따라 매우 달랐다. 여학교와 남학교, 실업고와 인문고, 읍면 지역과 도시 지역 등에 따라서 의견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두었을 뿐이다.

모집을 위한 교육정책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차지원을 권장하는 이유는 수요자 중심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교차지원을 허용하는 학교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심증판구는 모집을 위한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수와 정원이 급속하게 증가된 반면에 고3 수험생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학입시 현장의 모습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극히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입시난에 봉착하거나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 않을 수 없다. 제주대학교의 경우에 통상 입시 경쟁률은 2:1 정도는 된다. 이 정도라면 입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반문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부를 보면 사정은 다르다. 학과간에, 학부간에 경쟁률 격차가 매우 심하여 미달 근처에서 맴도는 학과가 더러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차지원을 허용해도 이러한 상태는 지속이 되고 있는 데 교차지원을 불허했을 시에는 실제로 미달하는 학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와 같이 입학 대상 학생이 작년 대비 17%나 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학과 교수와 학장들이 교차지원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의 전체 입장에서 보면 모집인원에 대한 미달은 대외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

“

교차지원은 좁은 선택의 폭을 확대해 준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교차지원 허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렇게 풀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문에 우선은 학생들을 쉽게 많이 모집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답 중에 교차지원은 최고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모집한 후에 수업과정에서 교차승인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교차지원한 학생들은 힘들어하는 정도가 더욱 심하다. 고등학교에서 인문계열은 과학탐구와 수리영역에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교수들도 전혀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투덜대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더욱이 개혁, 개혁하면서 대학에서도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고 하여 필수과목이 사라지거나 거의 한 두 과목만 놔둔 상태다. 필수과목이라도 있으면 계열에 가장 기초적인 과목(예 : 수학, 물리 등)은 강제로라도 가르치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나 학생이나 모두다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달은 면해야 한다는 학교 당국의 절대절명 속에서 이런 사항은 매우 하잘 것 없는 것, 또는 복 좋은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제도

교차지원은 모집단위의 광역화를 의미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8조 제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모집단위 광역화의 기본 취지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외국 대학과 같이 우리나라의 몇몇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일단 대학에 들어온 후 전공

은 2학년이나 3학년 때 정하라는 선 입학, 후 전공 선택의 취지를 생각하면 교차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겠다. 사실 아무런 기초적 지식이 없는 상황의 고등학교 학생에게 평생을 결정짓는 것과 같은 전공 선택을 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택과목이 있어서 자신의 전공을 준비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수능점수 올리기 경쟁에만 몰두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점수가 발표되면 자신의 적성이나 꿈을 중심으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중심으로 우선은 대학, 다음은 학과 순으로 결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훈련소 신병처럼 발에 신발을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신발에 발을 맞추어 가는, 즉 점수에 전공을 맞추어 가는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입학한 후에 자신의 적성과 꿈에 전공이 맞지 않아서 휴학생이 급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교차승인은 일단은 이러한 좁은 선택의 폭을 확대해 준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제 대학은 복수전공과 학기 중에서 전과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승인으로 들어와도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기가 전에 비해 매우 넓어졌다. 그러므로 일단은 입학한 후에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 입학, 후 전공선택의 맥으로 보면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유리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현재 대학은 교차지원 실시 중

고등학교 시절에 인문계,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학

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학 진학에 있어서 계열을 제한하는 것은 동일계열 지원자에 대한 학업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장려할 만 하다. 그러나 중언부언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교차지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입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대학에서는 이미 그 학생이 동일계로 진학을 하였다 할 지라도 전과라는 제도를 통하여 다른 계열로 이동이 가능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설령 교차지원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입학만 해당 학과에 하고 2학년 내지 3학년 때는 다른 학과로, 심지어 다른 대학으로 전과 내지 전학을 하는 경우가 대학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만약 교차지원을 이 학생에게 허용했다고 한다면 일차적으로 자신의 희망에 맞는 학과나 학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은 대학을 입학해서 1년 내지 2년 동안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기 위해 필요 없는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생이 자연계열로 이동이 가능하고, 자연계열 학생도 인문·사회계열로 이동이 가능한 교차지원이 실시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학과정에서의 교차지원 허용 여부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을 뿐이다.

교차지원 허용은 최대한 확대되어야

이 글을 쓰기 위하여 응시계열 제한 여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가 <표 1>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도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은 학교가 많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한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숫자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예·체

<표 1> 연간 응시계열 제한 여부

연도	제한	비제한
1997년도	58	105
1998년도	64	133
1999년도	54	146
2000년도	82	104
2001년도	100	90
2002년도	114	74

능학과에 대한 것이다. 즉 예·체능에 대한 제한 학교 수만 늘어나고 있을 뿐 일반학과에 대한 제한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편이다. 사실 모집에 걱정이 없는 소위 명문대학들도 교차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모든 분야에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혁의 기초 이념은 바로 수익자 중심 또는 소비자 중심이다. 소비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으로 입학정책도 변할 수밖에 없다. 교차지원 허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대학교에서 필수 과목을 최소한으로 신설하면서 보충하거나 교차지원에 따른 가산점수를 조정한다면 그렇게 풀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차지원 허용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건국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총괄위원, 한국행정학회 감사·이사, 미국 켄터키 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서 학생처장을 병행하고 있으며, 녹색평화도시서귀포시21추진협의회 의장,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부산·경남·울산·제주행정학회 부회장,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한국지역정보학회 제주지회장 등으로 활동중이다. 논저로는 『행정사례집』(공저), 『지방정부의 개혁』(공저), 『Globalization Strategies for Cheju Island's Tourism Industry』, 『국제자유도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 다수가 있다.